

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3. 1. 18.(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도시재생사업기획단<br>신도시정비지원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문영훈 (044-201-496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주무관 | 민규원 (044-201-4961) |
| 보도일시  | 2023년 1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8.(수) 14:00 이후 보도 가능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
##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(안) 발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TF 개최

- 내달 발의를 위해 방향성 및 주요 내용을 밀도 있게 검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18일 「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」를 개최하여 올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(안)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, 특별법(안)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.
  - 국토교통부는 「국토부장관 -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('22.9.8)」에서 '23년 2월 특별법(안) 발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
  - 이후 「민관합동TF」 전체회의, 분과회의 등에서 특별법(안)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는 한편,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, 지자체 상설협의체, 민간업계 간담회 등을 특별법(안)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(안)의 비전과 목적,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, 추진체계, 지원사항, 공공기여, 이주대책 등 특별법(안)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.
  - ① 먼저 TF위원들은 특별법(안)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, 도시기능 강화,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면서,

-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,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1기 신도시 등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.

② 특별법(안)의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흥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,

- 국토부가 수립하는 “정비기본방침”과 1기 신도시 등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“정비기본계획”의 수립체계, 법적근거와 함께 국토교통부, 기초지자체, 광역지자체의 역할 등도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.

③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·체계적·순차적 정비,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,

- 아울러 기반시설 도입 시 인구·가구·연령·생활패턴 등 현재와 미래지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.

④ 공공기여의 경우,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,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,

-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 단위의 광역적 정비인 만큼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이주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.

□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“준비 중인 특별법(안)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,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”이라면서

- “주택·교통·기반시설·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(안)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